



| 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<b>보 도 자 료</b>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위원회   | <b>보도</b> <b>배포 시부터 보도가능</b> 배포    2017.10.11(수)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책 임 자   | 금융위 금융제도팀장<br>홍 성 기(02-2100-2840)   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이 영 평 사무관<br>(02-2100-2842) |
|   | 금융위 보험과장<br>손 주 형(02-2100-2960)                  |       | 변 경 홍 사무관<br>(02-2100-2945) |
|   | 금감원 제재심의국장<br>이 효 근(02-3145-7800)                |       | 임 춘 하 팀 장<br>(02-3145-7821) |

## 제 목 :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·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

- ① (과징금)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'기본부과율'을 폐지하고,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'부과기준율' 도입
- ② (과태료) 과태료 산정시 고려하는 위반동기 및 위반결과를 세분화하고, 예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
- ③ (기 타)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제재제도 정비

## 1 개 요

□ '17.10.11일 금융위원회는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(금융위 고시) 개정안을 의결하였음

-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 개정('17.10.19 시행)에 맞추어 과징금·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

※ 기본부과율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「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(금융위 고시)도 개정(10.11일 금융위 의결) 참고

### <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사항 >

- ①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'숨방망이' 금전제재' 문제 개선
- ②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
- ③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'부과기준율'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

## 2 주요 내용

### 1.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

#### ① 기본부과율 삭제 및 부과기준율 도입

- (현행)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\*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\*\*을 적용

\* 위반금액 × 부과비율 (예시: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× 10%)

\*\* (2억 이하) 7/10 → (2~20억) 7/20 → (20~200억) 7/40 → (200억~2천억) 7/80 → (2천억 초과) 7/160

$$\text{법정부과한도액 (위반금액} \times \text{부과비율)} \times \text{기본부과율} = \text{기본과징금} \pm \text{가중·감경 및 조정} = \text{과징금 부과액}$$

- (개정)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\*을 차등 적용

\*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%, 중대한 위반행위 75%,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%

$$\text{법정부과한도액 (위반금액} \times \text{부과비율)} \times \text{부과기준율*} = \text{기본과징금} \pm \text{가중·감경 및 조정} = \text{과징금 부과액}$$

※ 금융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은 약 2.47배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남

### <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선안 >

① 부과기준율표 :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

| 중대성의 정도      |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| 부과기준율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| 2.3이상             | 100%  |
| 중대한 위반행위     | 1.6이상 2.3미만       | 75%   |
|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| 1.6미만             | 50%   |

※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(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부과기준율에 10%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

② **세부평가 기준표** :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(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)

| 부과수준      |            |     | 상 (3점)  | 중 (2점)  | 하 (1점)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참작사항      | 비중         |  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반행위 내용   | 위반행위 동기    | 0.2 |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|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| 상 (3점) 또는 중 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|           | 위반행위 방법    | 0.2 |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,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  |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,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  | 상 (3점) 또는 중 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| 위반행위 정도   | 부당이득 규모    | 0.2 | 위반기간, 위반금액, 거래조건,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,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   | 위반기간, 위반금액, 거래조건,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,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       | 상 (3점) 또는 중 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|           | 피해 규모      | 0.2 | 위반기간, 위반금액,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,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,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| 위반기간, 위반금액,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,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,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    | 상 (3점) 또는 중 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| 위반행위 정도   | 시장에 미치는 영향 | 0.1 |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·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·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  | 상 (3점) 또는 중 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| 위반기간 및 횟수 |            | 0.1 |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     |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상 (3점) 또는 중 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
\*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(특수관계인)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.

③ **참작사항별 부과수준 평가의 예시**\*를 통해 세부기준을 가급적 구체화

\* (참작사항별 관련 예시)

(1) **위반행위 동기** :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☞ **중(2점)**

(2) **위반행위 방법** :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,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참여한 경우 등 ☞ **상(3점)**  
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☞ **중(2점)**

(3) **부당이득 규모** : 신용공여, 채권·주식 취득,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(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)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(당기순이익/자기자본)보다 큰 경우 등 ☞ **상(3점)**  
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(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)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(당기순이익/총자산)보다 큰 경우,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,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%(또는 당기순이익의 10%)보다 큰 경우 등. 다만, 부당이득이 10억원(자기자본 1.5조원 미만시 3억원) 이하인 경우 하(1점)로 볼 수 있다. ☞ **중(2점)**

(4) **피해규모** :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(예상액 포함)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(1)이 정하는 금액\*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☞ **상(3점)**

\* Min[자기자본의 2%(다만, 자기자본의 2%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), 100억원(다만, 자기자본이 1.5~2.5조원인 경우 300억, 자기자본이 2.5조원 이상인 경우 500억)]

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(예상액 포함)이 10억원(자기자본이 1.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)을 초과하는 경우,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☞ **중(2점)**

(5) **시장에 미치는 영향**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☞ **상(3점)**

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 등 ☞ **중(2점)**

## 2 과징금 가중·감면사유 신설, 삭제 및 보완

- 부과기준을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·감면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,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

### < 과징금 가중·감면 삭제·신설항목 및 개정사유 >

|                  | 삭제 또는 신설되는 가중·감면항목  | 개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<br>중<br>사<br>유 | 위반기간(180일내 0.1%, 180~365일 0.2%, 365일 초과 0.4% 가중), 위반횟수(재범 20%)                  | 세부평가 기준표 中 “위반기간 및 횟수”와 중복     |
|                  | 경제적·다른 이득 취득, 금융기관·금융 거래자에게 중대 손실, 금융시장 신용질서 크게 훼손(20%)                         | “부당이득 규모·피해규모, 시장에 미치는 영향”과 중복 |
|                  | 위반자의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(20%)  | “위반행위 방법”과 중복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(20%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<br>면<br>사<br>유 | 금융산업·금융기관 신용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고 위반행위 동기·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(50% 감경) | “위반행위 동기, 시장에 미치는 영향”과 중복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(10%)                         | “위반행위 동기”와 중복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정부시책 준수과정에서 위반시 감경(30%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가중·감경 후 과징금이 자본금·자기자본의 10%를 초과하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➡ 초과액 감액                   | 과징금 과다부과의 문제 해소                |
| 신<br>설           |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➡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태료 면제사유와 균형                   |

※ 개정 후 가중사유: ①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 초과시 차액 가중, ②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시 특별이익과 기본과징금과의 차액 가중

개정 후 감면사유: ①자진시정·치유시 감경(30%), ②자진신고시 감경(20% → 30%로 인상), ③예방을 위한 자체감사·대책마련시 감경(50%), ④경영실태평가 1 등급시 감경(10%), ⑤재무상태 고려 감액(50%)

## 2.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

### 1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 개선

-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세분화\*하고, 동기 및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, 예정비율을 조정

\* 위반동기를 현행 고의·과실에서 목적·동기·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·중·하로 구분함으로써 제재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

- 아울러, 개별·구체적인 사안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예정비율에 10%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(조치안에 사유 명시)

### <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개선안 >

#### 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| 위반결과 \ 동기 | 상            | 중           | 하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중 대       | 법정최고금액의 100% | 법정최고금액의 80% | 법정최고금액의 60% |
| 보 통       | 법정최고금액의 80%  | 법정최고금액의 60% | 법정최고금액의 40% |
| 경 미       | 법정최고금액의 60%  | 법정최고금액의 40% | 법정최고금액의 20% |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나.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(이하 “예정비율”이라 한다)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(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%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다.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“중대”로 본다.

## ② 건별부와 원칙 명시

-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검사·제재규정에 명시하고
-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실무기준으로 건별부과를 운영 중인 보험·자본시장법상 일부 과태료 관련 사항을 반영(별표 신설)

## ③ 개인에 대한 건별 과태료 총액 부과한도 조정

- 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\*의 10배로 조정

\* 법률에서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외에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

## ④ 소액 과태료에 대한 면제근거 명시

-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(건별 부과시에는 과태료 합산 총액)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\*

\* 은행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(10.19일 시행)

## ⑤ 과태료 가중·감면사유 신설, 삭제 및 보완

- ① 과징금 감경사유의 사례에 맞추어 하나의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“자진신고”와 “자진시정”을 각각 별도의 과태료 감경 사유(30%)로 구분(자진신고·자진시정 적극 유도)

- ② 과태료 건별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을 감안하여 합산액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함\*

\* 상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(§8②, 법무부 예규)상 감경사유와 동일(50%)

- ③ 금융거래자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(30%)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유도하고 과징금 양정\*과의 형평 제고

\* 과징금은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 배상시 배상액 범위내 과징금 감액이 가능

- ④ 모든 금융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범시 가중은 과잉 제재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재범 가중기준(10%)을 삭제

- 다만, 동일 법규위반에 따른 재범 가중기준(20%)은 과잉제재 논란의 소지가 적으므로 현행 유지

## 3. 기타 제재제도 개선사항

-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해당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

-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함

### < 개정대상 조문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>

| 조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| 개정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---|
| <b>제재대상<br/>위법·부당행위</b><br>* 규정 §5     |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법·부당 행위* 열거<br>* '감독 태만', '사회적 물의' 등 포함 | 법률위반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삭제                    |
| <b>자체징계 제한</b><br>* 규정 §16             | 금감원장 제재요구 전에 금융기관이 임직원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           | 자체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신분제재 양정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제한규정 삭제   |
| <b>제재효과</b><br>* 규정 §22                |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*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<br>* 해임권고·직무정지·문책경고      | 임원 선임제한 규정은 지배구조법 및 개별 법령에 있으므로 삭제          |
| <b>과징금·과태료<br/>부과시 병과등</b><br>* 규정 §31 | 기관·개인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 기관에만 부과           |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되, 기관에만 부과(개인 면제)하는 사유는 유지 |
| <b>변상시의 병과</b><br>* 규정 §32             | 신분제재와 변상요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과규정이 없더라도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신분제재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삭제   |
| <b>외국 금융기관에<br/>대한 특례</b><br>* 규정 §46  |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제재시 금감원장의 대표자 교체 요구                | 국내지점 대표자의 위반행위시 면직요구 등 업권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므로 삭제 |

② 제재에 가중·감경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가중·감경수준의 합을 가중·감경 전의 제재수준에 가감하도록 양정 순서를 명확화\*

- \* 임원에 대한 "정직"(정직은 가중 불가)에 해당하고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가 각 1개씩 있는 경우 가중(+1)과 감경(-1)을 합한 후(0) 정직에 가감시 정직에 해당
- \* 과태료 기준금액이 1억원(법상 한도와 동일)이고 가중금액이 2천만원, 감경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가중과 감경을 합한 후 금액(△1천만원)을 1억원에서 차감 (1억원은 가중할 수 없으므로 감경만 적용하여 7천만원으로 부과 x)

### 3 시행 시기

□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

-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,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름

- 다만,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\*

- \* 부과기준을 도입 근거를 신설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(10.19일 시행)에 동일한 내용의 부칙을 둔 점을 감안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넓게 들었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## 참고

### 「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 개정 주요내용

※ 기초서류 : 보험금 지급의무를 담은 약관, 사업방법서 등

①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을 도입 (검사·제재규정 개정案 반영)

- '기본부과율'을 폐지하고,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'부과기준율'을 도입하여 기본과징금 산정
-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(매우중대·중대·중대성弱)와 위반 동기(고의·과실)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~100% 범위에서 산출
-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,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(내부통제시스템 등),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·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

$$\begin{array}{|c|} \hline \text{법정부과한도액} \\ \text{(위반금액} \times \text{부과비율)} \\ \hline \end{array} \times \text{부과기준율} = \begin{array}{|c|} \hline \text{기본과징금} \\ \hline \end{array} \pm \begin{array}{|c|} \hline \text{가중·감경} \\ \text{및 조정} \\ \hline \end{array} = \begin{array}{|c|} \hline \text{과징금} \\ \text{부과액} \\ \hline \end{array}$$

② 감경사유 추가·조정 (검사·제재규정 개정案 반영)

-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감경사유 추가·조정
-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(20% → 30%)하여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
-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(20% → 50%) (검사·제재규정 既반영)
- 가중·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

③ 기타 조문 정비

-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한 절사(검사·제재규정 既반영)